

87년 자살 발표 근로자

의문사위, 타살 의혹 제기

1987년 민주노조 결성에 참여하던 중 사측 조합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출두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처리됐던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근로자 정경식(당시 29세)씨 사건에 대해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16일 "당시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최소한 鄭씨가 유골 발견 장소에서 숨지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며 "鄭씨가 타살된 뒤 옮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그 증거로 ▶현장에서 발견된 노끈에 혈흔 등이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고서▶시체가 9개월 동안이나 방치됐던 현장 토양에서 시체 부패시 생기는 동물성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연구원의 증언 등을 제시했다.

규명위는 "당시 경찰은 '鄭씨가 자신이 폭행한 李모씨가 요구하는 합의금 1백50만원을 구할 수 없어 비관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鄭씨가 8백여만원을 저축한 상태였다"며 "상식적으로 鄭씨가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대구고검 崔모 검사에게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崔검사는 이에 불응했다. 이에 대해 崔검사는 "변사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검사로서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계다가 鄭씨는 의문사한 것이 아니므로 규명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궁옥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1987년 의문사 정경식씨

"무리하게 자살로 결론"

의문사 규명위 밝혀

검찰과 경찰이 1987년 행방불명된 지 9개월 만에 경남 창원 불모산에서 유골로 발견된 대우중공업(주) 노동자 정경식(鄭京植·당시 29세)씨에 대해 무리하게 자살로 결론지은 사실이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골이 발견된 토양에서 시체 부패 때 발생하는 유기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지 않은 점, 목을 맨 끈에 혈흔이 없는 점 그리고 유골상태가 9개월간 동일 장소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국과수의 의견이 수사팀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수사팀이 이를 배척하고 정황 증거만으로 무리하게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진희기자 river@hk.co.kr

“87년 실종 정경식씨

숨진 뒤 시신 옮겨져”

의문사위, 수사검사 조사키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987년 실종돼 야산에서 유골로 발견된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 정경식씨(당시 28세)가 당시 수사결과와는 달리 시신 발견 장소에서 숨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씨 사건을 지휘했던 최광태(崔光太) 대구고검 검사를 조사하기 위해 12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 검사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이덕인 사건 관련 보도

"의문사 정경식씨 숨진 뒤 사체유기"(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6일 지난 1987년 노조지부장 선거과정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두요구를 받았다가 실종, 이듬해 야산에서 유골로 발견된 대우중공업(주) 창원공장 노동자 정경식씨가 이전 수사결과와는 달리 사체 발견장소에서 숨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정례브리핑에서 "유골이 발견된 토양에서 사체 부패때 발생하는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되지 않은 점, 목을 맨 끈에 혈흔이 없는 점 그리고 유골상태가 9개월간 동일 장소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국과수 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할 때 정씨는 다른 곳에서 이미 숨진 뒤 사체가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관련, 당시 정씨 사건을 지휘했던 최광태 검사(현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 현장 증거물에 대한 타살혐의 부분을 수사했는지와 당시 자살이 아닌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고의로 배척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2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 검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정씨가 노조지부장 선거과정의 폭행사건으로 이모씨에게 고소당한 뒤 합의금 150만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비관, 공장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나 유족들은 정씨에게 충분한 돈이 있었고 상식적으로 자살로 볼 수 없는 현장 등을 감안할 때 사망한 뒤 사체가 유기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최 검사는 언론사에 배포한 '진상규명위의 동행명령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진상규명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답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서를 받겠다고 동행을 명령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진상규명위의 위상을 억지로 정립하기 위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south@yna.co.kr

(끝)

"노점상 생존권 투쟁도 민주화 운동"

의문사위원회, 95년 익사 이덕인씨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 인정

손병관 기자 redguard@ohmynews.com

95년 11월 인천 앞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돼 사인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던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당시 만 27세)씨의 죽음이 당시 수사당국의 발표대로 단순 익사임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덕인 사건을 조사해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www.truthfinder.go.kr, 이하 의문사위원회)는 "이씨의 죽음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며 이씨 및 유족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최근 분신한 노점상 박봉규씨의 죽음을 놓고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서울시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문사위원회가 한 장애인 노점상의 민주생존권적 저항을 넓은 범주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둘러싼 논의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9일 의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8명의 위원들 중 7인이 이덕인 사건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승현 위원(변호사)만이 과거 이덕인 사건의 변호를 수임한 이유를 들어 기권했다.

이씨는 95년 11월 아암도에서 노점철거 반대 망루 농성을 벌였다가 탈출을 시도한 뒤 행방불명됐다. 이씨는 실종된 지 3일만인 11월28일 아암도 해변에서 상의가 벗겨진 채 밧줄이 온몸에 감긴 변사체로 발견돼 사인 규명을 요구하는 노점상들의 격렬한 항의시위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동 사건을 7년만에 재조사한 의문사위원회는 "당시 일부의 주장처럼 이씨가 경찰에 폭행당한 후 실신 상태에서 물에 던져졌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며 이씨가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연안 부두 쪽으로 수영을 하다가 탈진, 익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의문사위원회는 "사체에 피멍이 있었으나 사인(익사)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었고, 당시 부검의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인을 조작 은폐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11월25일 저녁7시20~30분 사이 이씨가 바다로 헤엄쳐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이씨가 물에 들어가기 전 공권력에 의해 체포됐을 가능성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의문사위원회는 "사체에 감겨진 밧줄도 당시 해변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포장마차



▲ 95년 11월 철거반대 망루농성 중 탈출을 시도하다 인천 앞바다에서 익사한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의 생전 모습.

를 고정하는 붓 (10mm 두께)로, 해변에 수없이 널려 있는 것이다. 수영중 탈진해 숨진 이씨가 해변으로 떠내려오면서 바닷가에 버려진 줄들에 감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는 "이씨가 참여한 노점철거 반대 망루농성은 공권력의 지나친 행사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결정했다.

이씨는 1995년 6월부터 인천시가 휴식공간 목적으로 아암도의 군사보호시설 지구 철조망을 제거하자 이곳에서 노점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인천시 연수구청이 경찰과 철거용역회사 직원 15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 노점상 강제 철거에 나서자 30여명의 동료들과 철탑 망루에 올라가 철거저지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은 망루 농성자들에게 한겨울에 물대포를 쏘고, 농성자 중에 당뇨병 환자 등 부상자가 있음에도 의약품과 음식을 전해주지 않는 등 강경 대응을 고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위원회 조사2과의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될 게 아니냐고 반문할지 몰라도 망루 농성자들에게는 구속 또는 도주라는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 이씨 역시 당시 한 지역신문에 의해 '농성 주도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무리한 탈출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문사위원회는 또 "당시 강제철거를 맡은 용역 회사 역시 건달과 폭력배를 다수 동원, 각종 철거사업에서 무차별 폭행 등을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업체인데, 경찰과 용역회사가 이들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법 집행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농성에 참여했다가 사고로 숨진 노점상에 대해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 너무 무리한 결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문사위원회 내부에서도 "당시 농성 참가로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주화 투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의문사위원회는 "이씨가 철거반대 농성 외에도 8.15 남북공동행사,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투쟁 등 민중운동에 꾸준히 참여한 것이 이씨의 죽음이 일련의 민주화 투쟁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의문사위원회는 이씨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이번 주내에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2002/09/10 오전 09:28
© 2002 OhmyNews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 위법한 공권력으로 사망”

의문사규명위 밝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지난 95년 노점상 철거 항의농성 도중 탈출을 시도하다 의문사한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당시 27세)씨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노점상 철거 반대투쟁은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성이 인정되며, 해당 구청이 농성자들에게 대해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을 차단한 행위 등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씨의 죽음에 경찰의 조직적 개입이나 조작·은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95년 인천 아암도에서 노점상 생활을 시작, 그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경찰 등을 동원해 노점상 철거에 나서자 망루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다 실종 사흘만에 아암도 해변에서 상의가 벗겨지고 밧줄이 온몸에 감긴 변사체로 발견됐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kr

70년대 전향공작 관련자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1일 지난 1989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숨진 미전향장기수 최석기씨 의문사와 관련, 당시 최씨에 대한 전향공작에 참여한 조모(55)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대전교도소 수용자였던 조씨는 교도소내에 설치된 전향공작 전담반의 요청에 따라 최씨에게 전향을 강요하며 폭행을 가한 의혹이 있는 만큼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지만, 지난달 말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했다"며 "의문사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의문사특별법 제3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에 대해 위원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위원회 조사결과, 법무부는 73년 대전, 광주, 전주, 대구 등 4개 좌익수 수용교도소에 전향공작전담반을 설치, 미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전향 공작을 실시했으며 전담반은 일반 재소자까지 동원, 미전향장기수에 대한 폭행을 통해 전향을 이끌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south@yna.co.kr

(끝)

의문사위 두번째 과태료 부과 결정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韓相範)는 11일 "지난 197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장기수 강제전향작업 과정에서 숨진 최석기(당시 43세)씨 사건과 관련, 당시 崔씨를 폭행했던 동료 재소자 趙모(57)씨가 조사를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oins 중앙일보

- [Go!! 월드컵] 내일의 경기결과를 맞춰라!!
-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약비교
- 후보·유권자 정책 성향 해부
- 6·13 지방선거 말말말

규명위 조사 결과 崔씨는 지난 53년 남하, 간첩활동을 하다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74년 당시 중앙정보부의 지휘로 실시된 비전향장기수 강제전향작업에 동원된 재소자 趙씨 등에 의해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으나 趙씨는 지난 4월 진술요청을 거부하는 등 규명위의 조사에 불응해왔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현재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趙씨에게 "오는 14일까지는 서면 또는 면접을 통해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종 통보서를 발송하는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과태료 액수와 부과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규명위는 97년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6세)씨 사건과 관련 진술을 거부해온 당시 수사지휘 검사 정윤기(鄭倫基)영월지청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지난 4일 결정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74년 의문사한 비전향 장기수 최석기씨

전향공작전담반 폭행으로 사망

지난 74년 의문사한 비전향 장기수 최석기씨 죽음에 국가기관의 전향공작을 담당하는 '전향공작전담반'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1일 "전향공작전담반의 요청을 받은 일반수형자 조모씨가 전향강요를 위해 최씨를 폭행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냈다"며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가 동행명령을 거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향공작전담반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4년 4월 4일 최씨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보름여 동안 대전교도소 격리 1방에 같이 기거했다. 전향공작전담반은 "전향공작을 위해 교도소에서 운영했던 격리 1방에서 조모씨 등이 전향강요 폭행을 하다 최씨가 사망했다고 당시 보안과장, 당직주임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는 지난 73년 8월 대전교도소 내에 만들어진 '전향공작전담반'의 요청에 의해 격리사동 1방에 20여일간 거주하며 비전향장기수 안모·이모씨에게 폭행을 가해 강제전향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진상규명위는 법무연수원을 통해 '전향공작 전담반 1기 교육생 명단'이라는 자료를 입수했다. 교육생들은 73년 8월 6일 공개 채용되기 1달 전부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생들은 대전·광주·전주·대구 교도소 등 좌의사범이 몰려 있는 4개의 교도소에 투입, 비전향 장기수들을 강제 전향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향공작전담반에 연루된 조모씨는 교도소의 목인 아래 '떡방'이란 완장을 차고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당시 교도소로부터 일반수형자에 비해 상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면에서 이어짐

전향공작전담반에 연루된 조모씨는 교도소의 목인 아래 '떡방'이란 완장을 차고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당시 교도소로부터 일반수형자에 비해 상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면에서 이어짐

전향공작전담반에 연루된 조모씨는 교도소의 목인 아래 '떡방'이란 완장을 차고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당시 교도소로부터 일반수형자에 비해 상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면에서 이어짐

전향공작전담반에 연루된 조모씨는 교도소의 목인 아래 '떡방'이란 완장을 차고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당시 교도소로부터 일반수형자에 비해 상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면에서 이어짐

전향공작전담반에 연루된 조모씨는 교도소의 목인 아래 '떡방'이란 완장을 차고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당시 교도소로부터 일반수형자에 비해 상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면에서 이어짐

전향공작전담반

최석기씨 사망에 연루

▶1면에서 이어짐

전향공작전담반은 "지난 74년 3월 대전교도소 교무과장의 기안으로 '미전향재소자 전향공작에 기여한 공로를 찬양·위문하기 위해 사회참관(사회로의 외출허용)을 실시하겠다'는 기록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전향공작전담반은 최씨 죽음에 연루된 조씨의 조사를 위해 동행명령을 요구했지만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조씨가 이를 거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전에서 상당한 재력으로 알려진 조씨는 전향공작전담반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부담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향공작전담반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특정목적(전향)을 위해 계획적으로 폭행을 조장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야만적 행위"라며 "조씨가 마무리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씨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중정, 장기수 전향공작 주도

73년 교도소 4곳에 전담반 배치... 폭력사범 동원해 고문도

의문사규명위 밝혀

유신정권 초기인 1970년대 초반 중앙정보부의 주도 아래 교도소내 비전향 장기수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향공작이 벌어졌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가 수감중인 폭력사범 등을 동원해 장기수들을 고문하면서 전향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4월 2일치 18면 참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0~80년대 교도소내 비전향 장기수들의 의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향공작 전모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 조사내용을 보면, 지난 73년 3월 광주·전주·대전·대구 등 전국 4개 지역 교도소에는 500여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수감돼 있었고, 당시 법무부는 '전향공작 전담반' 50여명을 선발해 그해 8월 이들을 교도소에 배치했다.

법무부가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전향공작을 서둘렀던 이유는 주로 남

로당 유격대 출신인 이들 장기수들이 4·19 이후 무기징역에서 20년형으로 감형돼 당시 그들의 출소가 임박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향공작은 장기수들을 '좌익사상' 확산 정도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나눠 전담요원을 배치했다.

당시 전향심사의 모든 과정은 중앙정보부에 보고됐고, 중앙정보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전향 여부를 판단해 지시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쪽은 또 "당시 중앙정보부가 전국 각 교도소에 발송한 전향관련 문건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예규로 정한 '좌익수형자 전향공작전담반 운영지침'에는 중앙정보부 관련 사항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위원회쪽은 덧붙였다.

전담반은 또 이 과정에서 이른바 '떡봉이'로 불리는, 같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폭력사범을 동원해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고문을 가하며 전향을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가 입수한 지리산 유격대 출신의 한 장기수

가 73년 8월말 작성한 전향서에는 "이대로 가면 교도소 안에서 고문에 죽을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만기출소를 한 달 앞두고 전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전향심사위원회는 이 진술을 전향근거로 인정했다.

위원회쪽은 "전향공작 전담반"의 활동으로 73~74년 사이에 300여명의 장기수가 고문에 못이겨 전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75년에 사회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이미 만기출소한 비전향 좌익수 128명이 보안감호소에 재수감됐고, 보호감호소 안에서 또 다시 전향공작이 벌어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70년대 후반~80년대의 전향공작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안전법은 89년 폐지됐고 98년 8월 김대중 정부는 사상전향제도 폐지를 선언하면서 준법서약서 제도를 도입했으나, 99년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비전향 장기수 17명이 사면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김훈 최해정 기자 hoonk@hani.co.kr

“中情, 좌익 장기수 전향 공작”

73년 4개 교도소 전담반 배치... 폭력사범 동원 고문도

의문사규명위 의혹 제기

유신정권때인 1970년대 초반 당시 중앙정보부 주도하에 교도소내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대대적인 전향공작이 벌어졌으며 특히 수감중인 폭력사범들까지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1일 70~80년대 교도소내 비전향 장기수들의 의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전향작업의 전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조사결과 73년 광주 등 전국 4개 지역 교도소에 비전향 장기수 500여명이 수감된 상황에서 법무부는 '전향전담 공작반' 50명을 선발, 각 교도소에 배치했다. 장기수들은 '좌익 사상' 확산도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분류됐으며, 같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폭력사범인 이른바 '떡봉이' 들로부터 고문을 받으며 전향을

강요당했다는 것.

의문사위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각 교도소에 발송한 전향관련 문건, 장기수의 전향서등 이같은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전향 출소한 장기수들이 75년 사회안전법에 따라 재수감된 후 벌어진 70년대 후반~80년대 전향 공작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윤정기자 prufrock@munhwa.co.kr

장기수 3명 전향강요 폭행 사망

의문사위 “교도소쪽 심장마비·단순자살 처리”

지난 1970년대 비전향장기수 전향 공작과 관련된 옥사사건을 조사중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대전과 대구교도소에서 숨진 무기수 최석기(당시 43살), 박용서(당시 53살), 손윤규(당시 51살)씨 등 3명이 전향을 강요 받는 과정에서 숨졌다고 29일 밝혔다.

《한겨레》 8월21일치 14면 참조

의문사위 조사를 보면, 최씨는 지난 74년 4월4일 교도소내 격리방으로 끌려가 수감중인 폭력사범 조아무개(현재 수감중)씨로부터 사상전향을 강요 당하며 폭행을 당해 그날 저녁 8시께 숨졌다. 또 박씨는 같은해 7월19일 격

리방으로 끌려가 몸을 바늘로 찔리는 고문을 당한 뒤, 감방으로 돌아와 유리조각으로 허벅지 동맥을 끊고 자살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손씨도 76년 3월24일 전향공작을 강요하는 폭행을 당한 뒤, 항의단식을 계속하다 4월1일 교도관들에 의해 강제급식을 당했고, 이날 저녁 7시께 사망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교도소는 당시 이들의 죽음을 모두 심장마비, 단순자살, 또는 병사 등으로 처리했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비전향 장기수 3명 고문으로 옥중사망”

의문사위 주장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1970년대 옥중에 서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 세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이 교도소에서 사상 전향을 강요받으며 고문·폭행을 당하다 숨졌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의문사위는 74년 4, 7월 대전 교도소에서 사망한 최석기·박용서씨와 76년 대구교도소에서 숨진 손윤규씨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최씨는 타살됐고, 차씨는 고문에 못이겨 자살했으며, 손씨는 폭행에 항의해 단식투쟁을 벌이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초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발표된 최씨의 경우 교도소 측의 사주를 받은 일반 폭력사범 조모씨로부터 사상 전향을 강요당하며 입에 수건을 물린 채 바닥에 눕혀져 구타당하다 사망했다는 것이다. 또 자살한 차씨의 경우 교도관 김모씨 등으로부터 온몸을 바늘로 찔리는 고문을 당한 뒤 이를 못이겨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빈혈 등으로 숨졌다면 손씨는 전향공작 과정에서 자행된 폭행에 항의, 단식투쟁을 하던 중 교도소 측이 손씨의 입을 벌리고 강제급식을 하다 건강이 나빠져 숨졌다는 것이다. 윤창희 기자 <theplay@joongang.co.kr>

“장기수 3명 폭행 사망 朴정권 전향공작 은폐”

의문사규명위 밝혀

유신시절인 1973년부터 진행된 ‘전향공작’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비전향장기수와 죄의 수행자가 숨졌고 ‘전향공작 전담반’을 뒤 강제적인 사상 전향을 주도한 중앙정보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29일 교도소에서 발생한 의문사 3건에 대한 중간조사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상규명위 김준곤(金煥坤) 상임위원은 “74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한 죄의 수행자 최석기씨(당시 43세)와 비전향장기수 박용서씨(당시 53세), 76년 대구교도소에서 사망한 비전향장기수 손윤규씨(당시 53세)는 전향공작 중 당한 폭행이 사망의 직간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최씨는 74년 4월 4일 독거방에서 심장마비 때문

에 숨진 것으로 발표된 당시 수사 결과와 달리 이날 오후 8시경 교도소내 격리사동으로 옮겨진 뒤 전향공작원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는 것. 당시 교도소장과 중앙정보부 관계자들은 최씨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처리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고 진상규명위는 설명했다.

74년 7월 20일 사망한 비전향장기수 박씨도 사망 당일 격리사동으로 옮겨져 전향공작원들로부터 온몸을 바늘로 찔리는 등 모진 고문을 당했다. 박씨는 ‘전향공작 강요 말라’는 혈서를 쓰고 교도소 창살의 유리 파편으로 동맥을 끊어 자살했다.

손씨는 대구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76년 3월 24일부터 자신이 쓴 자술서가 전향서로 위조된 사실에 항의해 단식농성을 벌이다 교도소측에서 세 차례에 걸쳐 손씨의 입을 통해 위에 호스를 찔러 넣어 소금물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강제급식을 실시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비전향 장기수 최석기씨 등 “전향강요 폭행으로 사망”

진상규명위원회 발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73년부터 법무부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조직적으로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옥중 전향공작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전과자를 활용한 상습폭력으로 장기수들이 사망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최석기 박용서 손운규 사건 등 비전향 장기수 전향공작과

옥중사망 의문사 사건 중간발표에서 법무부와 중정은 교도소 내에 좌익수 전향공작전담반을 설치하고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조직적 전향공작과 고문, 폭력을 행사해 이 과정에서 이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조사결과 1955년 국가보안법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이던 최석기씨는 격리사동에서 입에 수건이 물리고 바

닥에 누어진 상태에서 폭력전과자 조모씨의 극심한 폭행으로 숨졌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당시 교도소 보안과장은 최씨의 유족에게 ‘잠만 자는 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말하는 등 사실을 은폐했으며 최씨를 폭행했던 조씨는 전향공작의 공적을 인정받아 교도소에서 결혼하고 만기보다 4년 일찍 출소하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운해기자 justice@kmib.co.kr

“전향거부 장기수 2명 타살”

■ 의문사위 밝혀

70년대 中情공작 과정에서 폭행·강제급식으로 인해 또 1명은 고문못견뎌 자살

유신정권의 교도소내 사상전향 공작과정에서 비전향 장기수들이 상습폭력으로 사망했고,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9일 1970년대 비전향 장기수 3명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전향공작 중 폭행으로 직·간접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74년 대전교도소 수감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 종결된

최석기(崔錫基)씨는 일반 수형자 조모씨에 의해 입에 수건을 물리고 바닥에 눕혀져 몸 전체를 구타당하는 등 극심한 폭행을 당한 후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조씨가 비전향자를 전향시키면 출소시켜 주겠다는 교도당국의 사주를 받고 격리병동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밝혔다. 조기 출소한 조씨의 공적서에는 ‘6명의 극렬한 좌익수형자를 전향시킨 공이 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사망후 교도소장과 중앙정보부 담당자들은 사인을 심장마비로 처리해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74년 대전교도소에서 유리파편으로 동맥을 절단해 자

살한 박용서(朴隆緒)씨의 경우, 간첩으로 남파됐지만 활동 전에 당국에 붙잡혀 다른 남파 공작원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는데도 전향공작을 강요,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북에 처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전향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전달했음에도 바늘로 찌르는 고문을 지속적으로 당하자 이를 비판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당시 교도당국은 박씨의 사망을 단순자살로 처리했다.

76년 대구교도소에서 사망한 손운규(孫鎭圭)씨는 교도당국이 ‘자술 진술서’를 ‘전향서’로 위조한 데 항의해 단식투쟁을 벌이던 중, 교도소 직원의 강제급식으로 사망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사회안전법 폐지” 단식투쟁중 옥사 변형만·김용성씨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규명위 결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7일, 지난 1975년 비전향 좌익사범 관리를 위해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결정하고, 감호소에서 이 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이다 강제급식 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변형만(당시 46살)·김용성(당시 63

살)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의문사위는 “당시 만기출소한 좌익 사범을 감호소에 수용하도록 했던 '사회안전법'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도 위배한 위헌적인 법률이었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사회안전법 폐지요구 단식중 사망 비전향장기수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변형만·김용성씨

형기를 마친 비전향장기수를 재수감하기 위해 1975년 제정됐다가 89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 입법된 '사회안전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국가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 동국대 명예교수)는 사회안전법 폐지를 주장하다 80년 청주보호감호소에서 숨진 변형만씨(생

년월일 미상)와 김용성씨(당시 63세)에 대한 결정문에서 “사회안전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문사규명위는 감호소에서 수감 중 사회안전법 폐지와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하다 감호소측의 강제급식 과정에서 숨진 변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

80년 수감중 단식농성 변형만·김용성씨 “감호소 강제급식중 사망”

의문사규명위 밝혀

1980년 청주보호감호소에서 숨진 변형만씨(당시 46세)와 김용성씨(당시 63세)는 사회안전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감호소측의 강제급식을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5일 의문사로 인정된 변씨와 김씨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17일 발표했다. 의문사위는 결정문에서 “변씨와 김씨가 80년 7월 청주보호감호소에서 사회안전법 폐지와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하는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감호소측의 강제급식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공법 위반으로 15년을 복역한 비전향좌익수인 변씨와 김씨는 출소하자

나 출소만기 직전 사회안전법에 따라 2년간의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청주보호감호소에 수감중 서적반입 제한조치에 항의해 단식하다 입에 고무호스를 집어넣고 소금물을 강제로 붓는 감호소측의 강제급식 과정에서 숨졌다.

의문사위는 “사회안전법은 범법행위가 없는 사람에 대해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하는 형사적 제재이자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따라서 사회안전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법은 50~60년대 간첩죄 등으로 복역한 이들이 70년대 초반 대거 출소하자 75년 7월16일 제정됐으며 이를 근거로 75~78년에 형기만료 직전이나 출소한 150명의 비전향 좌익수들이 다시 수감됐다. 이 법은 위법성 논

란으로 89년 5월 폐지되고 보안관찰법으로 바뀌었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소속 회원들은 17일 서울 국회앞과 한나라당, 민주당사 앞에서 '의문사특별법'을 개정하라며 1인시위를 벌였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악법 저항 사망 비전향 장기수 2명

의문사위 “민주화 인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실정법에 저항하다 숨진 비전향장기수의 죽음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17일 지난 80년 7월 청주보안감호소 수감중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숨진 비전향장기수 변형만·김용성씨 사망사건과 관련, “감호소측의 무리한 강제급식 과정에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과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결정문에서 “이들은 감호소측이 서준식(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의 서적을 압수한 것에 항의,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도 철폐, 보안감호수용자의 처우개선 등을 주장했으며, 단식 3일째인 7월11일 무리한 강제급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당시 고무호스를 이용해 염도가 높은 급식물을 강제로 투입, 급식자들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안전법은 특정범죄의 예방을 빌미로 범법행위가 없는 사람의 자유마저 박탈한 권위주의 시대의 악법”이라면서 “두 사람의 저항은 국민의 기본권 침

해에 적극 항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명위는 지난 74년 교도소측의 강제 전향공작에 저항하다 숨진 비전향장기수 최석기·박응서·손윤규씨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장기수 후원단체 등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80년 악법저항 농성중사망 보안감호2명 의문사 인정

1975년부터 89년까지 이른바 특정범죄의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시행된 사회안전법으로 15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재수감과 출소 연기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수감자들은 사회안전법의 폐지와 피보안감호처분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80년 7월 11일 당시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있던 비전향장기수 변형만(당시 46세)과 김용성(// 63세)이 단식농성 도중 강제급식을 받아 사망했다고 17일 밝혔다. /황현택기자

“사회안전법 철폐” 주장 獄死 변형만·김용성씨 민주화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7일 1970~80년대 비전향장기수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80년 7월 이의 철폐를 주장하다 청주보호감호소에서 숨진 비전향장기수 변형만 김용성씨의 활동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진상규명위는 결정문을 통해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상 보안처분은 비전향좌익사범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헌적 법률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윤해기자

강제급식으로 사망한 변형만·김용성씨

의문사위, 민주화 운동 인정

사회안전법 폐지 등 요구하다 숨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80년 7월11일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사회안전법 폐지를 요구하는 단식을 벌이다 교도관이 입에 고무호스를 넣고 ‘강제급식’을 실시, 숨을 거둔 변형만·김용성씨 사건을 민주화운동과 관련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문사규명위에 따르면 변씨와 김씨는 사회안전법 폐지, 보안감호제도 철폐, 보안감호수용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80년 7월9일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당시 청주보호감호소장인 이모씨는 같은해 11일 “밤을 세워서라도(강제급식을) 다 시켜라”고 지시했고 단식농성자 모두에게 현자, 나이 등에 상관없이 강제급식이 이뤄졌다.

교도관들은 단식농성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양 옆을 꼼짝 못하게 붙잡은 상태에서 입에 갈색 고무호스를 집어넣고 급식물을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급식물에 대해 감호과 계장 변모씨는 “맹물에다 분유를 타고 왕소금을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속이 타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급식물”이라며 “소장이 왕소금을 더 넣으라고 지시, 영양식이 아닌 독약이

나 다름 없었다”고 진술했다.

강제급식 이후 변씨는 구토를 하고 피를 토해 의무실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김씨도 강제급식을 받던 중 고개를 옆으로 떨구며 바닥에 쓰러진 뒤 사망했다.

의문사규명위는 “강제급식의 방법은 수용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급식에 사용하는 고무호스를 입과 목구멍을 통해 위장까지 집어 넣어 갈때기에 급식물을 투여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수용자에 대해 의사에 의한 진료 또는 대체수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건 관련 교도관들은 경고나 징계조치를 받지 않았고 감호소 의무과장 오모씨만이 면직된 뒤 복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사회안전법은 헌법질서의 최고 이념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로서 권위주의 통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변씨와 김씨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고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안전법은 지난 89년 5월 폐지되고 보안관찰법으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김창수 사건 관련 보도

71년 총선때 변사 김창수씨

의문사죄 “공권력에 희생”

“부정선거 허위자백 뒤 사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9일 1971년 8대 총선 당시 전남 목포시 대성동 선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부정선거 소송에 휘말려 서울로 조사받으러 오던 중 사망한 김창수(당시 53세·사진)씨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김씨는 71년 5월 25일 목포시 대성동 1구 투표소에서 선거감시활동을 벌이던 중 투표용지 100장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 시선관위에 보고했고 시선관위는 “단순 사무착오니 그대로 투표를 진행하라”고 지시해 투표는 그대로 끝났다.

그러나 개표결과 집권 공화당의 강기천후보가 야당인 신민당 김경인 후보에게 5000여표 차로 패한 것으로 드러나자 공화당은 곧바로 “신민당원들이 투표용지를 훔쳐 부정선거를



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인으로 김씨를 지목했다.

김씨는 경찰과 공화당원 등의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6월 20일 “투표 전에 신민당원들이 투표용지 100장을 탈취해갔다”는 내용의 허위자백을 했으며 6월 21일 대질신문을 위해 경찰 2명, 공화당원 2명과 함께 야간열차로 상경하다 6월 22일 오전 1시 20분쯤 전북 김제역 인근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의문사위는 밝혔다.

의문사위는 ▲김씨가 기차에서 사라지기 전 술을 마시지 않았고 ▲상외가 벗겨진 채 피투성이로 발견됐으며 ▲법의학자 3명의 사체사진 재감정 소견이 “단순 추락뿐 아니라 외력에 의한 손상도 있다”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 단순 추락사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kr

"경찰, 사망 원인 놓고 4차례 번복"

의문사위원회, 71년 김창수 사건에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

손병관 기자 redguard@ohmynews.com

1971년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경찰에 임의 동행돼 상경하던 야간 열차에서 떨어져 의문사한 김창수(당시 53세, 목포시 대성동 투표구 선거관리부위원장)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죽음을 놓고 일주일 동안 무려 4차례나 사인을 번복하고,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줄이는데 급급해 동행인 조사는 물론, 현장 검증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71년 총선 당시 목포시 대성동 투표구 선거관리부위원장을 맡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김창수씨의 생전 모습.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www.truthfinder.go.kr, 이하 의문사위원회)는 9일 "71년 총선 당시 공화당의 '부정선거 주장'에 휘말린 상황에서 상경 중 열차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의 죽음에는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7일 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씨의 죽음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의문사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김씨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71년은 대선과 총선이 한달 간격으로 이어져 정국이 요동치던 시절이었다. 그해 4월27일 대선에서 김대중 신민당 후보를 불과 90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긴 박정희 대통령은 한달 뒤 잇달아 실시되는 총선에서 김대중의 지역구인 목포에서 신민당을 누르기 위해 5.16 쿠데타 동지인 강기천씨를 공화당 후보로 공천하고, 경찰과 중앙정보부, 폭력조직까지 동원한 금권·관권선거를 자행했다.

중앙당 차원의 전폭 지원에도 불구하고, 5월23일 김대중이 덤프트럭에 의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목포의 표심은 신민당으로 기울었고, 결국 공화당은 신민당에 5천여 표 차이로 패배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목포시 대성동에서 사무적으로 투표용지 100매에 대해 결번이 생긴 것을 "신민당 참관인들이 투표용지를 절취해서 부정투표를 했다"고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6월 초순부터 '투표용지 결번'을 처음 발견, 신고한 김창수씨를 여관 등지에서 회유, 협박하는 공작수사를 계속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김씨는 6월20일 "신민당 참관인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투표용지를 절취했다"는 허위 자백을 해야 했다.

경찰은 김씨의 자백을 근거로 신민당 참관인 2명을 구속 수감했고, 김씨는 범행 사

실을 부인하던 김씨와의 대질 조사를 위해 6월21일 오후 9시경 경찰 2명, 공화당 간부 2명과 목포행 서울발 열차에 탑승했다.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씨는 다음날 새벽 1시20분경 열차에서 떨어져 전북 김제역 부근 철길에서 상의가 벗겨지고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김제의 한 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동안 김씨의 죽음을 놓고 무려 4차례나 발표를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처음에는 동승 경관들의 주장을 근거로 '김씨가 자살했다'고 발표했다가 '실족사'로 정정했다.

그러나 실족 원인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자 목포경찰서와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에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다시 김씨가 사망 전 술을 먹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광주고검은 "김씨가 오랜 심문으로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다가 돌연 탈출을 시도, 열차에서 추락사했다"는 추정 발표를 내놨다.

역무원이 '공권력 개입' 결정적 증언
"할아버지도 정치적 희생... 유족 아픔에 공감"

한 암시적인 역무원이 김창수씨의 사망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사망할 당시 김제역 역무원으로 일했던 경선영(사망)씨는 그해 11월27일 유족에게 직접 연락을 해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두 명이 열차에서 내려와 김제역 주변을 배회했고, 나중에 조사를 나온 형사도 '큰일 날 수 있으니 아무 소리 말라'는 주의를 줬다"고 증언을 했다.

김씨의 장녀 승자씨가 녹취해 보관해온 경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일 새벽 2~3시경 이리 및 서대전으로부터 괴전화가 2~3차례 왔고, 낯선 두 사람이 찾아와 '일행이 셋이었는데 한 명이 없어져 찾으러 왔다'며 컷속말을 주고받으며 역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조사를 나온 노모 형사도 경씨에게 "김창수가 죽거나 잘못되면 큰일나고 정부에 크게 미치는 것이 있으니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경씨는 승자씨에게 "나의 할아버지도 정치적 사건으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느끼는 아픔을 공감한다. 나중에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시 열차에 동승했던 공화당 김모 지구당 부위원장은 유족들이 지난 6월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소연했지만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손병관 기자

그해 6월27일 있었던 부검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가 "외력에 의한 손상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 병합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경찰은 '외력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임의 동행중인 참고인이 탈출하다 추락사했음에도 동행 경관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고, 탈출 과정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김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의문사위원회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김창수 사건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락 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도 없이 서둘러 수사를 종결시켰다"며 "경찰이 총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공작 수사에 착수했다가 참고인이 죽음에 이르자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고 결론내렸다.

공화당의 부정선거 주장과 달리 광주지법(71년)과 대법원(74년)은 투표용지 절취 혐의로 구속됐던 신민당 참관인 박모씨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의문사위원회의 관계자는 "김씨와 열차를 동승했던 사람들이 김씨를 폭행 치사했다는 심증이 적지 않으나 폭행치사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의문사위원회는 "김씨가 권위주의 정권에 직접 항거하기 위한 정당-사회단체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권위주의 정권시절 부정, 탈법 선거를 감시하고 올바른 투개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관위 업무에 중사한 활동이 민주화 운동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권력이 이런 활동에 중사한 김씨를 수사하고, 기차에 강제로 탑승시키는 과정에서도 공권력의 위법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김창수 사건과 같은 71년 일어난 '양상석 사건'은 31년이 지난 상황에서 주요 증인들이 이미 사망하고 관련 자료들이 거의 유실돼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위원회의 관계자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양상석의 검시사건부가 사라지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영구미제 사건이 될 공산이 커졌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71년 신민당 충남 금산지구당 위원장으로 총선에 입후보한 양씨는 그해 4.27 대선 당일 실종된 후 3일만에 금산지역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으나 유족들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병상의 어머니께 한동안 아버지 죽음을 알리지 못했다"

김창수씨 장남 용운씨 '31년 회한' 풀려

김창수씨의 장남 용운(55)씨는 "정권에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는 야합에 동조하지 않아 희생된 아버지의 죽음이 뒤늦게나마 인정받아 다행이다"는 소감을 전했다.

용운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당시 병중에 있던 어머니에게는 서너달 동안이나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다"며 "나중에 사정을 눈치를 쬐 당시의 슬픔은 이루 말할 것이 없었고, 91년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버지가 공권력에 의해 죽었다는 확신을 놓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용운씨는 "당시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관계기관에 탄원을 거듭했지만, 오히려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회신만 받았다"고 말했다.

그해 8월14일 신적수 법무장관은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 이기에 더욱 더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유족들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용운씨는 "진실이 곧이곧대로 알려질 경우의 파장 때문에 제대로 진상 규명조차 시도하지 못했고,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아버지 사건을 국회에 정식으로 청원을 못했다"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준 의문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 손병관 기자

2002/09/09 오후 6:52
© 2002 OhmyNews



9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회의실에서 한 조사관이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숨진 고 김창수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71년 열차추락 의문사 김창수씨

"위법한 공권력에 희생"

의문사규명위 밝혀

하기 전에 머리 등 상반신 10곳에 타박상을 입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9일, 지난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돼 의문사한 김창수(당시 53살)씨의 죽음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71년 5월 전남 목포시 대성동 선거관리 부위원장으로 개표 과정을 참관하다 투표용지 100장이 부족하다고 신고했으나, 오히려 부정선거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열차편으로 서울로 압송되던 중 김제역 근처에서 추락사했다.

당시 김씨의 신고는 계산 착오에 의한 것으로 현장에서 판명됐으나, 경찰은 김씨를 강압수사해 야당인 신민당 쪽 참관인들이 투표용지를 흘렸다는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김씨를 압송하

71년 추락사 김창수씨 “공권력에 의한 사망” 의문사규명족 결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1971년 총선에 전남 목포시 대성동 제1투표구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했다가 공화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참고인으로 선정돼 서울로 올라오던 중 열차에서 추락 의문사한 김창수(당시 53세)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9일 결정했다.

규명위는 “사망 직전 김씨가 경찰로부터 협박을 당해 ‘신민당이 투표용지를 훔쳐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허위 자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김씨가 발견 당시 상의가 모두 찢겨진 상태였으며 머리에 폭행으로 생긴 상처가 있어 자살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71년 총선때 변사 김창수씨 의문사족 “공권력에 의한 사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971년 총선 당시 전남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근무하다 부정선거 소송과 관련해 대질신문을 위해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김창수(金昌洙·사망 당시 53세·사진)씨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9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투표 직전 김씨가 투표용지 100장이 부족하다고 신고했으나 이는 단순한 사무착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여당인 공화당은 선거에 지자 이를 문제삼아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김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협박에 못 이긴 김씨가 ‘신민당이 투표용지를 훔쳤다’고 허위 자백하자 경찰과 공화당 관계자는 대질신문을 위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김씨와 함께 서울로 향하는 야간열차를 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전북 김제역



인근 철로에서 상의가 모두 찢어진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다. 시신에는 추락으로 인한 손상 외에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규명위는 “권위주의 정권시절 올바른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김씨의 활동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며 “공작수사가 벌어진 점과 사망상태 등을 고려할 때 김씨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71년 총선때 변사 김창수씨 공권력 개입 추정

규명족 ‘의문사로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71년 8대 총선때 목포시 대성동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부정선거 소송에 휘말려 조사를 받기 위해 야간열차로 상경하던 중 의문사한 김창수씨(당시 53세·사진) 사건에 대해 “의문사로 인정된다”고 9일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월25일 투표 시작 전 김씨가 발견해 신고한 ‘투표용지 100장 부족’ 사실은 단순한 사무착오로 밝혀졌는데도 선거에 패배한 공화당은 이를 트집잡아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김씨에 대한 공작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어 “김씨가 수사기관의 끈질긴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6월 20일 ‘신민당이 투표용지를 절취했다’고 허위자백한 뒤 다음날 대질신문을 위해 경찰관 2명, 공화당원 2명과 함께



야간열차로 상경하다 6월22일 오전 1시20분쯤 김제역 인근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당시 수사기관이 ‘취중 실족 또는 단순추락사’라고 한 발표에 대해 “김씨가 기차에서 사라지기 전 술을 마시지 않았고 상의가 벗겨진 채 괴투성으로 발견된데다 사체사진을 재감정한 3명의 법의학자가 ‘추락뿐 아니라 외력에 의한 손상도 있다’고 소견을 밝힌 점으로 미뤄 단순 추락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권위주의 정권시절 올바른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김씨의 활동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으며 김씨의 죽음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김씨 사건을 의문사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71년 열차 추락사 선관위 김창수씨 의문사위 “공권력에 사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지난 1971년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목포발 서울행 열차에서 떨어져 숨진 전 목포시 대성동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수(사진·당시 53세) 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규명위는 “총선에서 패배한 여당이 수사기관과 공모해 야당에 부정투표 혐의를 씌우려고 벌인 강압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희생됐다.”면서 “김씨가 권위주의 정권에 직접 항거하지 않았더라도 김씨의 죽음이 부정선거에 맞서 올바른 투·개표가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은 투표용지 100장이 부족



하다는 김씨의 신고가 착오로 드러났음에도 “투표용지 도난에 야당이 연루됐음을 자백하라.”며 여관 등에서 20여일간 김씨를 강압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명위는 “김씨가 기차에서 떨어지기 전 술을 마시지 않았고 발견 당시 상의가 벗겨진 채 피투성이 상태였으며 법의학자의 재감정 결과 김씨의 몸에서 단순한 추락이 아닌 외력에 의한 손상도 발견됐다.”면서 “김씨가 술에 취해 떨어져 사망했다거나 탈출중 추락했다는 과거 수사기관의 발표는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세열기자
sylee@kdaily.com

“71년 총선때 김창수씨 變死사건 여당-수사기관서 개입”

의문사규명위 밝혀

1971년 총선 당시 전남 목포 선관위 직원으로 근무하다 선거에 진 공화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 대질 신문차 열차를 타고 상경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김창수(당시 53세·사진)씨 사건에는 당시 여당인 공화당과 수사기관이 직·간접으로 개입한 ‘의문사’로 인정된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가 9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투표 직전 김씨가 제기한 ‘투표용지 100매 부족’ 신고는 단순한 사무착오로 드러났는



데도 여당인 공화당은 선거에 지자 이를 트집 잡아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김씨에 대해 회유와

협박 등 공작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김씨는 수사기관의 끈질긴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신민당이 투표용지를 절취했다’고 허위자백을 한 뒤 다음날 대질신문을 위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공화당 관계자 및 경찰과 함께 야간 열차를 이용해 상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올바른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한 김씨의 활동은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있고 김씨 사체에 추락외에 기타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이 있는 점, 김씨에 대한 공작수사 과정 등을 볼 때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 사건을 ‘의문사’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법준기자 weiv@sgt.co.kr

71년 총선때 변사 선관쫓 김창수씨 “공권력에 희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9일 1971년 총선 당시 전남 목포시 대성동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부정선거 소송에 휘말려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로 오던 중 열차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발표된 김창수(金昌洙·당시 53세·사진)씨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정했다.

의문사위는 이날 “당시 공화당이 국가 정보기관과 지역 폭력배까지 동원, 금권·관권 선거를 실시하던 중 공화당 후보가 신민당 후보에게 패하자 김씨에게 신민당의 부정선거를 목격했다는 허위자백



을 강요했으며 열차에서의 추락사도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당시 김씨가 투표개시 전 투표용지 100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 진상조사에 나선 뒤 단순한 결번 실수임을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했으나 공화당이 이를 빌미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공작 수사를 강행,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Truth Commission Says 1971 Death of Election Official Not Accidental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announced yesterday that the 1971 death of Kim Chang-soo, a Mokpo election official, was not accidental as previously reported, but involved the then-ruling Democratic Republican Party (DRP) and government investigators.

Kim, who had monitored the May 25 general elections in 1971, died near a train track in Kimje, North Cholla Province on June 22 during an overnight train ride accompanied by two police officers and two DRP officials.

He was on his way to Seoul to testify regarding a lawsuit filed by the ruling party after he discovered 100 blank ballots missing from a voting station in Mokpo, North Cholla Province, on election day.

As this was later revealed to be

a simple mistake, voting went on as planned. But after the election ended in the victory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the DPR accused its rival of rigging the election and Kim was summoned as a key witness.

The commission said that Kim's death can be seen as a result of foul play in light of the fact that his upper body was

unclothed and covered with blood when he was found, suggesting that his death was not the result of a fall. The DPR was also revealed to have pressured Kim into falsely testifying that opposition Democratic Party members had stolen the ballots two days before his death, it said.

jysoh@koreatimes.co.kr

Truth Commission Says 1971 Death of Election Official Not Accidental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eptember 27 announced yesterday that the 1971 death of Kim Dae-jung, a leading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and government rival, was not accidental but involved the military. The commission said that Kim's death was a result of a military plot to assassinate him before his death. It said that the plot was carried out by a group of military officers who were loyal to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Park Chung-hee.

The commission also said that the military officers who were involved in the plot were punished. It said that the military officers who were involved in the plot were punished with death sentences. It said that the military officers who were involved in the plot were punished with death sentences.

The commission also said that the military officers who were involved in the plot were punished with death sentences. It said that the military officers who were involved in the plot were punished with death sentences.

The commission also said that the military officers who were involved in the plot were punished with death sentences. It said that the military officers who were involved in the plot were punished with death sentences.

김생수 사건 관련 보도

'86년 송도앞바다 변사체' 김성수씨 의문사죄 "타살 가능성"

“간접 사인은 뇌손상” 발표
당시 경찰은 자살로 처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1986년 6월 21일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몸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매달고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돼 자살처리된 서울대생 김성수(당시 20세·지리학과 1년·사진)씨에 대해 “타살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날 김씨 사건 중간발표에서 ▲당시 부검의가 의문사위 조사에서 “김씨의 직접사인은 의사지만 간접사인은 뇌손상”이라고 밝혔고 ▲사체에 매달린 콘크리트 덩어리가 당초 1개가 아닌 3-4개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발견된 김씨의 점퍼에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때린 흔적이 남아있고 ▲발견 당시 김씨가 입고있던 바지가 김씨의 것이 아닌 점 등을 피살의 증거로 들었다.



의문사위는 “김씨의 오른쪽 이마(7.0×2.0cm)와 머리 앞쪽(3.5×3.0cm)에 두피하 출혈이, 오른쪽 이마에 7.0×6.0cm 크기의 좌상이 발견됐다”며 “이같은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경뇌막하 출혈이 발생해 가사상

태에 빠진 김씨를 누군가가 물에 던져넣어 의사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또 “당시 부검의가 부검감정서를 작성하면서 김씨 장기의 플랑크톤 검출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의 조사도 참고인 진술을 왜곡하는 등 ‘김씨가 자살했다’는 쪽으로 꺾맞춘 측면도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86년 6월 18일 낮선 중년 남자의 전화를 받고 서울 하숙 집을 급히 나간 뒤 3일만에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으며, 당시 경찰은 김씨가 ‘저조한 성적과 자신의 사회부적응 등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결론내렸었다. /오남석기자

‘녹화사업’ 자료 고의소각 前보안사과장 잠적 ‘파문’

지난 80년대 운동권 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사업(녹화사업)과 관련,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를 받던 핵심인물이 관련 자료를 소각한 뒤 잠적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27일 “1982년 당시 보안사령부 심사과장이었던 서

의남씨를 19일 소환, 중요자료를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으나 서씨가 20일 관련 자료를 소각했다”면서 “서씨는 21일 재소환시 소각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서씨는 이후 의문사위가 방문조사에 나서자 행적을 감췄다. 소각문서는 녹화사업 관련 핵심자료인 보안사 업무일지와 의문사 의혹이 일고 있는 한영현씨 조사 내용 등이다.

/노윤정기자 prufrock@munhwa.co.kr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발표 '미흡'"

(강릉=연합뉴스) 유형재기자 =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는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86년 6월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성수(당시 20세, 서울대 지리학과 1년)씨에 대해 조작되고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데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의 아버지 김종욱(66)씨는 "타살은 확실한 것이고 어느 기관에서 누가 죽였는지 아직 밝히지 못해 그 부분이 흡족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경찰의 자살 결론에 대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16년동안 우리 부부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해 왔다"며 "운동권 활동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정황은 충분하다"면서 "공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 이승백(35) 사무국장도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아 말하기 멋하다"고 전제한 뒤 "공권력 관계와 정확한 증거 등은 없이 타살 가능성의 정황만 언급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진실이 모두 밝혀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고향인 강릉에서는 지난 2000년 3월 서울대 동문과 시민 등 175명이 참여한 기념사업회를 구성, 매년 6월20일 추모사업을 벌여왔다.

서울대 1년생이던 김씨는 지난 86년 6월21일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몸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매달고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돼 80년대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으로 꼽혀왔다.

yoo21@yna.co.kr

(끝)

"의문사 김성수씨 타살 판단"

규명위 "익사전 뇌손상 소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지난 1986년 6월21일 부산 송도 앞바다 매립지 방파제에서 몸에 시멘트덩이가 매달린 익사체로 발견된 김성수(당시 19살·서울대 지리학과 1년)군의 죽음이 '타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타살 근거로 △사건발생 당시 부검의가 김씨가 익사하기 전에 뇌손상을 입었다고 감정소견을 반복한 점 △현장에서 발견된 김씨의 점퍼

에 폭행 흔적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또 김씨의 몸에 매달려 있던 시멘트덩이가 발견 당시에는 1개였으나 3~4개 정도가 더 매달려 있던 흔적이 있었다고 최초 발견자들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 사건은 당시 안기부에서도 수사에 들어가 '염세자살' 사건으로 판단했으나, 국정원의 자료협조 거부로 당시 안기부 수사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의문사 서울대생 타살 정황"(종합)

(서울=연합뉴스) 황희경기자= 80년대 대표적인 의문사사건의 주인공으로 당시 자살로 발표됐던 서울대생 김성수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경찰이 사건을 자살로 몰기 위해 수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86년 6월21일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몸에 시멘트 덩이를 매단 채 익사체로 발견된 김성수씨 의문사사건에 대해 이런 내용의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의문사위는 "당시 부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담당 경찰이 목격자 조서를 조작했으며 김씨의 자살동기에 관한 참고인 왜곡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김씨가 바다에 빠지기 전 당한 뇌손상으로 가사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던져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시 부검의는 김씨의 사인을 익사로 결론지었으나 최근 위원회에서 익사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뇌손상이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부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당시 수사를 담당한 부산서부경찰서 형사가 사체의 최초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누군가 끌고 다니며 때린 흔적이 확인돼 중요한 증거로 지적된 김씨의 상의를 발견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 조사했으며 조서내용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당시 경찰은 참고인들이 김씨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임의대로 '김씨가 성적이 안 좋은 것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결론지은 조서를 작성하는 등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자살로 결론내리려 했다고 의문사위는 밝혔다.

위원회는 "당시 수사경찰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른 물증을 발견할 수 없어 자살로 종결했으며 사건발생후 사소한 말이라도 항부로 할 수 없었던 공안정국의 분위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김씨가 사망전 학생운동으로 2회 연행됐고, 당시 전방입소반대투쟁을 벌이다 분신자살한 서울대생 이재호씨와의 친분 등 정황으로 미뤄 당시 학생운동 관련으로 타살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김씨의 신원이 밝혀지기도 전인 86년 6월23일 김씨의 어머니에게 안기부직원이 전화를 걸어 김씨 가족에 대해 여러 사항을 물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안기부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zitrone@yna.co.kr

(끝)

86년 자살 발표 서울대생 의문사추, 타살의혹 제기

1980년대 중반 자살로 발표됐던 서울대생 김성수(金成洙)씨의 사망 원인은 타살이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살로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86년 6월 21일 부산에서 의사체로 발견된 김성수(당시 18세)씨는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그 정황으로 ▶金씨 시체 부검에 문제점이 많고 ▶수사 과정에서 중요 사실이 누락됐고 ▶참고인들의 조서가 조작됐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당시 金씨를 부검한 孫모씨는 최근 위원회에서 "金씨가 뇌손상을 입은 뒤 가사(假死) 상태에서 물 속에 빠졌을 수도 있다. 단순 의사로 결론내린 부검 결과는 잘못됐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특히 경찰이 시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정반대로 '金씨가 학교 성적이 안좋은 것을 비판해 자살했다'고 발표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후 의문사 규명” 오열하는 가족 27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영정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정동 기자

86년 송도앞바다 변사체 김성수군 의문사추 “타살 가능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986년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몸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매달고 익사한 채 발견된 서울대생 김성수군(당시 18세·사진)에 대해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중간조사 발표에서 “성적비관으로 인한 자살로 종결된 당시 수사 결과와 달리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고, 경찰이 사건을 자살로 몰아가기 위해 수사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김준곤(金浚坤) 상임위원은 “당시 부검의는 김군의 사인을 의사로 결론지었으나 최근 조사에서 의사 전에 당한 것으로 보이는



뇌 손상이 간접적인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며 “의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기 내 플랑크톤 검출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검소견서를 작성하는 등 당시 부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군은 1986년 6월 18일 중년 남자의 전화를 받고 서울 하숙집을 나간 뒤 3일 만에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몸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매달고 물구나무를 선 채로 물에 잠겨 있다 스킨스쿠버에 의해 발견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86년익사 자살처리 대학생 김성수씨 의문사툰 “타살 가능성”

부산 송도앞바다서 발견 ‘간접사인은 뇌손상’ 밝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7일 1986년 6월 21일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몸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매단 채 익사체로 발견돼 자살처리된 김성수씨(당시 18세·서울대 지리학과 1년)는 “타살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날 김씨 사건조사 중간발표에서 당시 부검의가 의문사위



故 성수 이병



진상규명 촉구

송상훈 이병의 어머니가 27일 국방부 앞에서 의문사한 아들의 죽음에 대한 당국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절규하고 있다. / 김문석기자

조사에서 “김씨의 직접사인은 익사지만 간접사인은 뇌손상”이라고 밝힌 점, 현장에서 발견된 김씨의 점퍼에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때린 흔적이 남아있는 점, 발견 당시 김씨가 입고 있던 바지가 김씨의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타살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의문사위는 “김씨의 오른쪽 이마와 머리 앞쪽에 두피하 출혈이, 오른쪽 이마에 좌상이 발견됐다”면서 “이같은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경뇌막하 출혈이 발생해 이미 사망한 상태 또는 가사상태에 빠진 김씨를 누군가가 익사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당시 부검의가 익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기내 플랑크톤 검출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검소견서를 작성했으며, 누군가가 잡아끌고 다닌 것 같은 손자국이 나있어 중요한 증거로 지적된 김씨의 점퍼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조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부산 서부경찰서 형사는 의문사위 조사에서 “다른 물증을 발견할 수 없어 자살로 종결했으며 사건발생후 사소한 말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공안정국의 분위기에서 제대로 수사를 벌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86년 6월 18일 한 중년 남자의 전화를 받고 서울 하숙집을 급히 나간 뒤 3일만에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으며, 당시 경찰은 김씨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에도 ‘김씨가 학교성적이 안 좋은 것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결론지었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86년 부산앞바다 변사체 김성수씨 의문사툰 “타살 추정”

“부검등 부실 자살 결론” 경찰 짜맞추기 수사 의혹

경찰이 운동권 대학생의 죽음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자살로 몰아가기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86년 6월 실종된 지 이틀만에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생 김성수(당시 18세·지리학과 1년)씨 사건과 관련, “김씨가 당시 경찰 발표대로 시험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아 가사상태에 빠진 뒤 바다에 던져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규명위는 또 당시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장기내 플랑크톤 검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익사로 판정하는 등 짜맞추기 수사를 벌인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김씨는 86년 6월 18일 오전 10시쯤 40대 남자의 전화를



김성수씨

받고 집을 나선 지 이틀만인 20일 오전 11시쯤 부산 앞바다 매립 공사장 방파제에서 3~4개의 시멘트 덩어리를 매달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 서부경찰서와 부산지검은 김씨가 사회부적응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규명위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사체를 처음 발견한 해녀와 현장 인근에서 김씨의 외투를 발견한 김모씨를 조사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부실수사를 벌인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규명위는 “외투를 발견한 김씨는 최근 규명위 조사에서 김성수씨의 외투에 폭행 흔적이 있었다는 결정적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부검의 손모씨가 김씨의 부검감정서를 작성하면서 국과수에 의뢰한 플랑크톤 검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익사 판정을 내린 사실도 확인했다. 손씨는 최근 규명위 조사에서 “김씨가 물에 들어가

기 전 뇌손상을 당했으며 이 때문에 물에 들어가기 전 가사상태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부검 소견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명위는 당시 김성수씨 주변인물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홍모·최모씨 등이 조서 내용이 원래의 진술 의도와 다르게 작성됐다고 최근 규명위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김씨가 일단 누구에게 의해 타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와 배경을 조사 중이다.

●죽음 배경을 둘러싼 의문점 86년 당시 서울대에서는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학생들이 무차별 연행되고 구속됐다. 규명위는 김씨가 입학한 직후 학내 동아리인 총연극회에 가입해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전방일소 반대 농성에 참여하는 등 학생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에 주목, 김씨가 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씨처럼 경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수배 중인 선배의 소재를 추궁받다 고문으로 의식을 잃은 뒤 바다에 유기됐을 가능성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세영기자 sylee@kdaily.com

86년 부산앞바다 익사체 김성수씨 의문사위 “타살 가능성”

“경찰이 수사결과 조작”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6년 자살로 처리됐던 서울대 지리학과 1학년 김성수(당시 18세·사진)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경찰이 사건을 자살로 몰아가기 위해 수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규명위는 이날 “86년 6월 20일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김씨에 대한 부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고, 담당경찰이 목격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여러 정황으로 보아 김씨가 바다에 빠지기 전 이미 사망했거나 폭행으로 가사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또한 “당시 수사를 담당한 부산 서부경찰서 형사가 사체의 최초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누군가 끌고 다니며 때린 흔적이 확인돼 중요한 증거로 지적된 김씨의 상의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조작했다”고 전했다. /황현택기자

1986년 익사체 발견 서울대생 김성수씨 의문사위 “타살 가능성”

“물에 빠지기前 뇌출혈”

1986년 6월 실종된 지 3일 만에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몸에 콘크리트 덩이를 매단 익사체로 발견, 자살로 발표됐던 서울대생 김성수(金成洙·사진·당시 18세)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27일 “김씨의 부검서를 재검정한 결과, 김씨가 물에 빠지기 전 이미 머리부분에 심한 손상을 받아 20cc에 이르는 뇌출혈이 있었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머리부분에 공격을 받은 후 가사(假死)상태에서 물에 던져 졌을 가능성을 보



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당시 경찰조사에서 제외됐던 최초 시신 발견자를 찾아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김씨의 면점퍼에 누군가가 구타한 듯한 손자국과 함께 심하게 잡아 끈 흔적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당시 경찰이 실제 점퍼를 찾아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조사해 점퍼에 대한 진술을 고의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당시 경찰에서 점퍼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고인은 의문사위 조사에서 “경찰 진술서에 나온 내용을 말한 기억이 없으며 글씨체도 본인의 것이 아니고 낙인도 누락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위는 그러나 김씨 주변에 안기부 등이 접근한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타살에 개입된 피의자나 기관 등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서울대생들에 대한 구속·연행이 한창 진행 중이던 86년 수배자들이 다수 포함된 서울대 연극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실종됐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의문사 민-관합동 재조사하라

1986년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콘크리트덩이를 매단 채 익사체로 발견된 서울대생 김성수군도 허원근 일병처럼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김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살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뚜렷한 자살 동기가 없어 사인에 의문이 많았는데 누군가에 의해 뇌손상을 입고 가사(假死)상태에서 바다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이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부검의가 당초 김군의 사인을 익사라고 밝혔으나 최근 조사에서 물에 빠지기 전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게 간접적 사망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 그는 익사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장기내 플랑크톤 검출 결과도 나오기 전에 부검 소견서를 작성하는 등 부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또 시신 발견자는 구타의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고 당시 참고인은 경찰조사 내

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문사는 대부분 오래 전 일인데다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고 있더라도 조작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이 때문에 군과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이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을 가리기 어렵다. 허원근 일병의 경우 얼마 전 진상규명위가 타살을 자살로 은폐조작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에 있었던 부대원들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공권력에 의한 타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군당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게 고작이다. 갖가지 억울한 죽음을 철저히 파헤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16일 만료되는 진상규명위 활동시한을 더 연장하고 군과 경찰 등의 의문사 재조사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제5공화국 초기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이뤄진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 고위 관계자는 30일 "26일 열린 57차 위원회에서 삼청교육대의 정책 입안 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와 관련해 의문사한 개별 희생자에 대해 사

인(死因)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삼청교육대 전반에 관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1980년 국가포고령을 내려 삼청교육대를 시행한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것"이라며 "녹화사업 진상 규명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때 삼청교육대에 관해서도 같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삼청교육대도 진상규명 5共녹화사업 조사병행”

의문사위 밝혀

1980년대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녹화사업 관련 조사를 할 때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80년 국가포고령 시행의 책임자인 만큼 녹화사업 관련 조사를 벌일 때 삼청교육대 문제도 함께 조사키로 9인 위원회가 내부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80년대 초 사회악을 소탕한다는 명분에 따라 국가포고령으로 시행된 삼청교육대는 반정부 인사를 포함, 4만여명을 군부대에 수용한 채 가혹한 훈련을 시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군사정권 시대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김희균기자belle@sgt.co.kr

"전 前대통령 조사시 삼청교육대도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녹화사업 관련 조사를 할 때 80년대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 80년 국가포고령 시행의 책임자인 만큼 녹화사업 관련조사를 위해 조사를 벌일 때 삼청교육대 문제도 함께 조사키로 9인 위원회가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80년대 초 사회악을 소탕한다는 명분에 따라 국가포고령으로 시행된 삼청교육대는 반정부 인사를 포함, 4만여명을 군부대에 수용한 채 가혹한 훈련을 시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군사정권 시대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south@yna.co.kr

(끝)

삼청교육 저항중 사망 전정배씨 '민주화' 인정

의문사규명위 밝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1년 6월 20일 육군5사단 삼청교육감호대대에서 경계병들의 사격으로 숨진 전정배(당시 30살)씨가 당시 삼청교육대의 불법성에 대해 집단저항을 벌이는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나, 전씨의 죽음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문사위 조사를 보면, 사건 당일 도로정비 작업에서 돌아온 감호생들 가운데 일부가 술과 담배를 몰래 들여온 사실이 발각돼 부대 장교들이 감호생 6명을 구타하는 장면을 다른 감호생들이 목격하고, 감호생들이 "때리지 말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라"고 항의하면서 집단저항이 시작됐다.

구타·구금 '공권력 불법성'

감호생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연병장에 모여 "죄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 교도소로 보내달라", "사회정화위원장과 의정부지청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연좌

농성을 벌이다가 밤 9시경 스크럼을 짜고 위병소 근처까지 나아가다 이를 저지하던 경비병들로부터 총격을 받았다. 당시 지휘관 ○씨는 위원회 조사에서 "상황이 급박해 발사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조준하지 말고, 땅바닥을 향해 위협사격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현장 지휘 장교들과 하사관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경비병들의 엠16 소총 이외에도 망루 위에 설치됐던 엠60 기관총도 발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발포로 인해 전씨는 총상을 입고 병원 후송 도중 숨졌고, 감호생 장아무개(당시 14살)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지휘관 ○씨가 근신처분을 받았고, 대대 간부 3명이 구속수사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감호생은 집단저항을 주도한 10명이 초병협박 등의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위원회는 전씨가 불법 구금에 항의해 정식 재판과 책임자 면담을 요구했던 점 등을 들어 전씨의 죽음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 사건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온 의문사위는 이 사업이 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사회정화위원회에서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됐으며, 이 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6만여명이 검거돼 이 중 4만여명이 군부대에 배속돼 4주간씩 '삼청교육'(일명 순화교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차원 진상조사 권고

이들은 순화교육이 끝난 뒤에도 당시 사회보호법에 따라 재판 없이 감호처분을 받아 계속 군부대에 수용됐다. 또 검거 대상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등 모호하게 규정돼 경찰의 자의적 집행이 가능했다고 의문사위는 덧붙였다.

숨진 전씨는 여자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가 주민 신고로 파출소에 연행된 뒤 삼청교육대로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정부에 권고했다.

김훈 기자 hoonk@hani.co.kr

‘삼청교육’ 사망등 9건 규명委, 의문사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6일 그동안 조사해 온 총 83건의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통해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 등 총 19건을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인한 의문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33건에 대해서는 기각, 30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졌으며, 1건은 유가족의 요청으로 취하됐다.

의문사위는 조사종결 시점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부터 미제상태였던 32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면서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정배씨 사망사건 등 9건을 의문사로 결정했다.

재야 지도자 장준하, 학생운동가인 이내창·이철규, 노동운동가 박창수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졌다.

/安容均기자 agon@chosun.com

장준하 사건 관련 보도

중정, 장준하 '위해분자' 분류 감시

의문사위, 중정작성 6쪽짜리 보고서 공개 ... 장씨 사망 당일 기록은 증발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지난 19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을 등반하다의문의 죽음을 당한 재야 지도자 고 장준하씨(사진)는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정권에 해가 되는 '위해(危害)분자'로 분류됐으며 조직적인 프락치 활용 등을 통해 밀착 감시가 이뤄졌음이 국정원이 보내 온 당시 중정 문서에 의해 드러났다.

8일 의문사위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당시 장씨를 담당했던 중정 6국5과 박 모 계장은 75년 3월 31일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6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장씨를 "현 정책을 비방하고 반체제활동을 조정하는 인물"로 묘사하며 범법자

료를 모아 처벌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위급 간부의 결재를 받은 이 보고서에서 박 계장은 국가원수 모독이나 유신헌법 반대행위는 물론 스캔들까지도 감시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나 중정이 장씨를 윗아래기 위해 개인적 약점까지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위 고위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박 계장은 정보과장 등 관찰경찰서 인력을 동원, 하루 한차례 이상 일일동향을 파악하게 한 것은 물론, 당시 장씨와 같은 정당에서 활동한 윤 모씨를 프락치로 활용해 정치활동을 감시하게 했으며 특히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프락치를 교체하면서 프락치간 경쟁까지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편검열 등을 통해 용의점이 드러날 경우, 미행이나 감시는 물론 "각급 첩보 보고서"를 비교해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이 보고서와 지금까지 국정원이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장씨에 대한 밀착 감시가 꾸준히 이뤄졌음이 입증됐음에도 유독 사망 당일 기록만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박 계장이 최근 다른 부서에 관련자료가 많다는 진술을 한 만큼 국정원은 비협조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지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정, 장준하 '위해분자' 분류 밀착감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지난 19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을 등반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재야 지도자 고 장준하씨는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정권에 해가 되는 '위해(危害)분자'로 분류됐으며 조직적인 프락치 활용 등을 통해 밀착 감시가 이뤄졌음이 국정원이 보내 온 당시 중정 문서에 의해 드러났다.

8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당시 장씨를 담당했던 중정 6국5과 박모 계장은 75년 3월31일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6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장씨를 '현 정책을 비방하고 반체제활동을 조정하는 인물'로 묘사하며 범법자료를 모아 처벌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위급 간부의 결재를 받은 이 보고서에서 박 계장은 국가원수 모독이나 유신헌법 반대행위는 물론 스캔들까지도 감시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나 중정이 장씨를 옹아매기 위해 개인적 약점까지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상규명위 고위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박계장은 정보과장 등 관할경찰서 인력을 동원, 하루 한차례 이상 일일동향을 파악하게 한 것은 물론, 당시 장씨와 같은 정당에서 활동한 윤모씨를 프락치로 활용해 정치활동을 감시하게 했으며 특히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프락치를 교체하면서 프락치간 경쟁까지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편검열 등을 통해 용의점이 드러날 경우, 미행이나 감시는 물론 '각급 첩보 보고서'를 비교해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이 보고서와 지금까지 국정원이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장씨에 대한 밀착 감시가 꾸준히 이뤄졌음이 입증됐음에도 유독 사망당일 기록만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박 계장이 최근 다른 부서에 관련자료가 많다는 진술을 한 만큼 국정원은 비협조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지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끝)

장준하씨 '위해분자' 분류 밀착감시

75년 中情작성 문건

1975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고 장준하(張俊河)씨를 '위해(危害)분자'로 분류하고 프락치를 통해 조직적으로 감시했다는 사실이 올 초 국가정보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에 보낸 문서에서 드러났다.

8일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당시 장씨를 담당했던 중정 6국 5과 박모 계장은 75년 3월 31일 작성한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라는 문건에서 "장씨는 '현 정책을 비방하고

반체제 활동을 조종하는 인물'로 범법 자료를 모아 처벌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정은 또 보고서에서 관할경찰서 인력을 동원해 장씨의 일일동향을 파악한 것은 물론 당시 장씨와 같은 정당에서 활동한 윤모씨를 프락치로 활용해 정치활동을 감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19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에서 등반하다 실족사한 것으로 발표됐다.

진상규명위 김준곤(金俊坤) 상임위원은 "국정원이 보내 온 자료를 통

해 중정이 장씨를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했음이 입증됐는데도 유독 사망 당일 기록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보고서 작성자가 최근 다른 부서에 관련 자료가 많다고 진술한 만큼 국정원은 실지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7일 장씨와 이철규(李哲揆)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을 방문해 실지조사를 하려 했으나 국정원측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진규기자 leon@donga.com

의문사위 '중앙정보부 관찰보고서' 공개

장준하 '위해분자' 분류 밀착감시

지난 70년대 당시 중앙정보부가 재야 지도자 고 장준하 선생을 '위해분자'로 분류, 조직적인 프락치 활용을 통해 밀착감시를 한 사실이 중정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장선생을 담당했던 중정 6국5과 박모 계장은 75년 3월31일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6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장선생에 대해 '현 정책을 비방하고 반체제활동을 조정하는 인물'로 묘사, 범법자료를 모아 처벌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박계장은 장씨를 처벌하기 위해 국가원수

프락치 활용 개인 스캔들까지 감시 사망당일 기록만 없는 것 납득 안돼

모독이나 유신헌법 반대행위는 물론 스캔들까지도 감시대상으로 삼는 등 개인적 약점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계장은 정보과장 등 관할 경찰서 인력을 동원, 하루 1차례 이상 일일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선생과 같은 정당에서 활동한 윤모씨를 프락치로 활용해 정치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락치를 교체하면서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우편검열 등을 통해 장선생의 용의점이 드러날 경우, 미행이나 감시 등 밀착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보고서와 국정원이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장씨에 대한 밀착 감시가 꾸준히 이뤄졌음이 입증됐음에도 유독 사망당일 기록만 없다는 것은 납

득할 수 없다"며 "박계장이 최근 다른 부서에 관련자료가 많다는 진술을 한 만큼 국정원은 비협조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지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 7일 국정원을 상대로 실지조사에 나섰으나 국정원측이 "(재공할만한)자료는 이미 제출했다"며 조사를 거부, 결국 무산됐다.

한편 장선생은 지난 60~70년대 대표적인 재야 지도자로 지난 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을 등반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w.com

75년 장준하선생 실족死 목격 증언 “동행자는 中情 정보원”

의문사조 “전직 中情 직원 진술 확보”
당시 中情 간부들 소환 신원 확인중



19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 등반길에 나섰던 실족사한 것으로 발표된 재야 지도자 장준하(張俊河·사진) 선생 의문사의 관련, 장 선생의 실족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당시 동행자가 중앙정보부 정보원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진술은 장 선생이 타살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현대사의 대표적인 미제사건인 장 선생 의문사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최근 전직 중정 직원으로부터 사건 당시 장 선생과 단 둘이서, 약사봉 정상까지 동행했던 김모씨가 중정의 정보원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당시 중정 간부들을 소환해 김씨의 정확한 신원을 조사하는 한편 당시 중정 정보원 명단에 김씨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키 위해 국정원에도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위원회의 다른 관계자는 “진술 당사자가 이전 소환됐을 때는 한때 이를 부인하는 등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선생 사망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김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장 선생과 함께 약사봉 정상



을 거쳐 하산하던 중 장 선생이 벼랑의 소나무를 잡고 비위에 발을 딛는 순간 가지가 휘청거리며 미끄러져 14m 아래로 추락했다”고 진술한 뒤 30여년 동안 같은 주장을 해왔다. 김씨는 당시 장 선생이 40여명 일행을 이끌며 혼자 약사봉으로 향하지 뒤따랐으며, 일행에게 사건 발생을 가장 먼저 알렸다.

김씨는 장 선생이 진보적 월간지 ‘사상계’를 발행하던 당시 알게 돼 장 선생이 신민당 후보로 7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을 때는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김씨 진술에 의존, 장 선생의 죽음을 단순 실족사로 결론지었으나 시신 뒷머리에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가 있고 사고지점에 대한 김씨 진술이 엇갈리는 점, 장 선생이 유신을 반대한 민주인사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정보기관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장준하선생 死因 못밝혀

의문사규명조 “진상규명 불능” 판정

유신정권 시절 대표적 의문사로 꼽히는 장준하(張俊河) 선생 실족사 사건에 대한 진상이 끝내 밝혀지지 못하고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16일 “장준하 선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인을 밝힐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A29면에 관련기사

한상범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이 사망 당일까지 장준하 선생을 밀착 감시하면서 동향을 기록한 자료를 입수했지만 사망 전날과 당일 기록만 빠져 있어 더 이상 진상에 접근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가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내렸지만 앞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진상규명위가 조사 활동을 재개하거나

이와 유사한 국가 기관이 출범할 경우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할 수는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 각각 광주시 청옥동 저수지와 전남 여수시 거문도 해변에서 ‘의혹의 익사체’로 발견된 이철규(당시 24세·조선대 교지편집장) 사건과 이내창(당시 27세·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내렸다.

진상규명위는 조사활동 마지막 날인 이날 그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37건 중 장준하 사건 등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12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1981년 삼정교육대 피해자 전정배씨(당시 29세) 사망사건 등 9건을 ‘의문사’로 인정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